

### 한나라 '종부세 9억 정부안' 수용 했지만...

# 당내 반발 여전... 향후 수정 가능성 시사

## '부자를 위한 감세' '거수기 정당' 등 논란, 여진 계속

한나라당은 29일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에 밀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거수기 논란이 이어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운선 대변인은 "다른 논의 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수정해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서만 논의했다"며 "결정된 만큼 10월 2일까지 의원총회나 당정협의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내로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당론으

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결국 두 번에 걸친 의원총회와 무기명 여론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정부안 무삭제 수용'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선택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안론'이 과세기준 등 일정부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정론'을 누른 것이다.

이날 최고위는 큰 논란 없이 20분 만에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순자 최고위원이 개편안의 시기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신중론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했으며, "우선 정부안을 받아들여,이

당로서는 정부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는 11월 국회가 법안심사에 들어갈 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론을 주장해온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도 당론 존중 의사를 표시, 솔렁이던 분위기가 진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날 종부세 '개편 내용'에 대한 당론을 채택한 게 아니라 소위 '개편 절차'에 대해서만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놓음에 따라 논쟁이 재연될 여지가 충분하다.

당내 소장개혁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도 당분간 추가 행동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당 및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예초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부자를 위한 감세', '부자 정당' 등을 고리로 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 내 긴장기류가 형성될 조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수도권 규제 완화' 놓고 또 갈등

### 차명진 "규제 완화" 논평에 이계진 "월권 행위" 발끈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이견을 가까스로 봉합한 한나라당이 이번엔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또다시 내부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차명진 대변인이 지난 27일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논평을 내놓은 데 대해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계진 의원이 29일 "월권"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것.

차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도권 공장 규제 철폐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침체에 빠진 경기

를 회복시키는 핵심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당 대변인 논평으로선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사적인 견해로 오인되기에 충분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당의 공식 당론인가, 아니면 개인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자 지위를 악용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국회, 국감 피감기관 광주·전남 16곳 등 477곳 확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내달 6일부터 20일간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광주·전남 16곳 등 477곳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 488곳보다 11곳이 줄었고,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129곳, 광역·자치단체 29곳, 정부투자기관 18곳, 한 국과학기술원 등 민간기관 301곳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국감 일정은 다음달 9일 광주지방 기상청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광주 세관, 광주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4일에는 광주교보와 광주지법, 광주교검과 광주 지검, 광주지방 노동청,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며 장흥교도소 시험이 예정돼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지역 국정감사 주요 일정

10/9 (목)	광주지방기상청
13 (월)	광주세관,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전남대병원
14 (화)	광주교보, 광주지법, 광주교검, 광주지검, 광주지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장흥교도소(시험)
16 (목)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지법국세청
21 (화)	광주시, 광주지방경찰청

또, 16일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지법 국세청, 21일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盧, 내일 퇴임후 첫 서울 나들이

### 남북정상선언 1주년 행사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음달 1일 퇴임 후 처음으로 상경한다.

참여정부 참모들의 주도로 다음달 1~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퇴임 후 7개월 여만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

노 전 대통령은 1일 기념행사 만찬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2일 국제학술대회 격려사를 한 뒤 봉하마을로 내려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참여정부가 남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6자회담 도출에 기여하고 북미관계에도 진전을 이뤄낸 경험을 토대로 남북관계, 대북문제, 국제관계 등

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에서 변화를 꾀하며 북핵, 식량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행사는 참여정부 참모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들어 친노(親盧) 진영이 각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노 전 대통령도 토론 전문 사이트 '민주주의2.0'을 개설, 현안 개입으로 여겨질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채가나 세걸집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 박지원 "시민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 기준"

### 정가 브리핑



○--민주당 박지원(목포)의원이 시민에 대한 충성도, 당에 대한 기여도,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목포시 용해동 사무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 이호균·황정호 전남도의원, 장복성 목포시의회의장 등 시의원 18명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시대 아니다. 돈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목포 시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귀향해 지역현안을 살피고, 월요일에 국회에 들어가 국정에 임한다)라고 있다"면서 "선거법에 저촉돼 재판이라도 받으면 본인도 곤경에 빠지지만 시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지역 주민에게 돈 쓰지 말고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 유종필씨 국회도서관장 임명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민주당 유종필 전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유 전 대

변인을 국회도서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 관장은 함평 출신(51)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와 한겨레 신문 기자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부비서관과 KTV 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3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올해 7월 까지 4년 10개월간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 "광주은행, 현 체제로 운영돼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은태(남구·무소속)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됐지만 다른 주요 지방은행에 비해서는 규모·수익성 측면에서 아직도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민영화보다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실한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인수여력이 충분한 투자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여건상 쉽지 않다"며 "더욱이 지역경제가 열악한 상태에서 자칫 서둘러 매각했다가 다른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과 거센 경쟁 속에서 성장한계에 부딪쳐 또다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지경·김지을기자 jkpark@

**국제경영컨설팅**  
International Advisory Service

● **총괄대표** : 조준환 10년 1급 M&A 전문  
● **주요** : 중소기업경영컨설팅, 투자 컨설팅, M&A 컨설팅, 재무구조개선 컨설팅, 인사관리 컨설팅  
● **특** : 중소기업경영컨설팅, 투자 컨설팅, M&A 컨설팅, 재무구조개선 컨설팅, 인사관리 컨설팅  
● **대표전화** : 02-522-3882-3883